

'집값 급등 지역' 주택 공시가격 크게 오를 듯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여의도·마포·양천·성동구 등 비강남권 지역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종의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 김 장관이 이날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지구지정에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들, 귀농인 유치만 적극 주민 갈등엔 무관심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 인구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이들의 농촌사회 부적응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북은 통계조사 이래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귀농 인구를 가장 많이 끌어들이었다. 지난해 2,316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했다. 전남 1,925가구, 경남 1,668가구, 충남 1,384가구 순이다.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4년 경북엔 334가구가 귀농했다. 이후 꾸준히 늘어 2012년부터 매년 2,000가구를 넘었다.

지난해 경북의 시·군별 추이를 보면 의성군이 177가구로 최다였고 상주시 174가구, 영천시 154가구, 안동시 136가구, 봉화군 134가구, 김천시 133가구 등이다. 도는 2021년까지 청년 귀농 창업 1,000명, 귀농 5만명 육성 등 귀농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촌)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다. 의성군엔 도내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귀농 전담 부서가 설치됐다.

시·군들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농작물 교육, 정보제공 등)에는 경쟁

적인 반면 귀농인 간 화합 및 주민과의 융화(화합) 사업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상주·문경시와 의성군 등 경북도내 일부 시·군에서 귀농 가구당 30만~50만 원의 집값이 비용을 지원하는 일회성 사업이 고작이다.

전남 강진군 등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이 감성화합마을 조성, 마을 위크숍 개최, 귀농인·주민 한마음 봉사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과 귀농인 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서 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 곳곳에서 농촌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인들이 원주민들과 자주 갈등을 빚는가 하면 고소·고발과 폭력 사태까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2015년 귀농 인구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과의 갈등·고립감'은 소득 부족, 농업 노동 부적응에 이어 역귀농 이유 가운데 세 번째로 꼽혔다.

한 식품자원경제 전문가는 "소득 향상 등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주민과의 갈등 관리 및 사회적 측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귀농인 교육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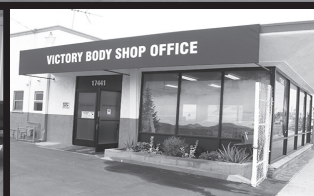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